



成長 거점도시 육성 開發

住居생활 安定化 도모

정부는 오는 86년까지 5차 5개년 계획기간 중 건설부문에 내외자 8조 1천599억 3천700만원을 투자하여 성장거점도시 육성 등 국토의 균형개발과 주택 100만호를 건설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또 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의 재정비 등으로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住岩 등 7개 다목적댐 건설로 수자원의 다목적 개발을 꾀하는 한편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하고 각급 도로의 포장을 계속 추진하여 公路 수송효율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에 의하면 5차 5개년 계획기간 중 민주복지사회에 대응하는 국토종합개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총 4천166억 8천800만원을 들여 국토의 균형개발에 주안을 둔 제2차 국토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및 토지부문에 2조 5천492억 3천8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을 위한 중소규모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고 택지공영개발 공급 등 공공기관에 의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수자원개발부문에는 1조 8천502억 6천400만원을 투입하여 陝川·住岩 등 7개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河川 489.5km를 개

수하며 錦江 등 6개 水系別 廣域상수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수송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도로건설 사업에 3조 1천23억 7천만원을 투자하고 고속도로 513.4km를 신설 확장하는 한편 일반도로 279km를 확장하고 국도 등 총연장 2천912km를 포장기로 했으며 도시계획부문에는 2천320억 4천700만원을 도시건설 사업과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기로 했다.

建築資材展示會 개최

건설부 4. 20일 부터

제 6 회 건축자재 전시회가 오는 4월 20일 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여의도 소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전시관에서 개최된다.

건설부와 공업진흥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건축자재부문에서 △구조재를 비롯 △창호재 △내외장재 △방수 및 단열재 △급수위생설비재 △냉난방 기자재 △전기설비재 등이고 건축모듈 부문에서는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건축물로 되어 있다.

이 전시회의 신청교부 및 접수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건설부에서 받는데 건축자재산업(K.S 제품 및 신개발 우수 자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都市계획 일부 조정기로

서울시 7월중 심의위 회부

서울시는 오래된 도시계획을 부분적으로 현실여건에 맞춰 조정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조정안을 마련 7월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기로 했다.

이번에 조정될 도시계획 내용은 △塋地·자연녹지 등 지역용도 △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구획정리 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등이다.

지역용도는 이번 조정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換地가 끝난 자

연녹지로 다시 묶인 땅은 대지로 환원된다.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로·시장·공원·학교 부지 등으로 결정된 곳이라도 불합리하거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해제된다. 또 도시계획사업은 신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재개발사업 부문만 적극 추진된다. 도시계획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지난 76년 재정비 이후 그동안 도시여건이 크게 변화했고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 많은 민怨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계획 조정내용을 구청 단위의 생활권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조정에 관련된 시민들은 6월 안으로 일간지에 공고될 도시계획안 열람 기간에 개진할 수 있다.

太陽熱설비 의무화

학교등 5층미만 공공건물

정부는 태양에너지 이용 설비를 적극 보급하기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5층 미만의 공공건물에는 차연형 태양열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동자부에 따르면 유류과등을 겪으면서 지난 78년부터 태양열 주택 등 태양열 이용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나 시설 및 기술이 미흡해 보급이 부진하다고 지적, 올해부터는 우선 공공부문에 이를 적극 보급해 점차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파급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건립되는 5층 미만의 학교·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태양열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기존건물의 증개축에도 태양열 설비를 권장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태양열 이용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태양열 이용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건물의 태양열 이용 설비의 무화를 위해 문교부 등 관계 당국과 이미 협의를 끝내고 제도적 장치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